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 46길 74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kr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문서번호 : 26-10-문화예술스포츠위-0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제 목 : [문예스위][성명] 영화 <암살자(들)>을 향한 정치적 압박은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전송일자 : 2026. 10. 30.(금)

전송매수 : 총 2매

[문화예술스포츠위][성명]

영화 <암살자(들)>을 향한 정치적 압박은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2026년 9월 23일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한 달 넘게 전례 없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작품을 '역사 왜곡', '패륜 영화'로 규정한 일부 정치인과 보수단체는 주연 배우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어 '우파 영화'에 출연하라고 요구하였고, 배우가 모델로 활동하는 기업에 광고 계약 철회를 압박하였다. 국회의원은 제작사가 즉시 부인한 중국 자본 의혹을 제기하고, 국책은행에 투자금 환수와 수사를 요구하였으며, 배우들의 계약 조건을 SNS에 공개하고, 소속 의원 109명 명의로 해외 영화제에 개막작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 결과 배우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야 했고, 영화제와 무대인사 일정은 모두 취소되었으며, 지역 극장 한 곳은 박스오피스 1위 상영작을 내렸다.

「대한민국헌법」 제22조 제1항은 '예술의 자유'를, 제21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는 창작자가 작품 참여를 스스로 결정하고 관객 앞에 선보일 자유를 핵심으로 한다. 출연을 이유로 주거를 겨냥하고 생계와 유통을 끊으려는 행위는 비평이 아닌 창작 활동에 대한 응징이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미 예술인의 견해를 이유로 한 지원 배제와 국가의 이념적 판단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국정감사권과 자료 요구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작품의 역사 해석을 이유로 투자 환수와 상영 철회, 창작자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이 헌법적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공적 권한과 집단적 압박이 결합된 형태로 되살아난 블랙리스트에 다름 아니다.

작품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고, 유족의 아픔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작품이어야 하며, 해결의 수단 또한 공권력이나 자금줄 차단이 아닌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 같은 방식의 압박은 이미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드라마 <닥터X>로도 번지고 있다. 광고주를 압박해 언론의 숨통을 끊었던 1974년의 언론 통제를 고발한 영화가, 반세기가 흐른 뒤에도 똑같은 방식의 탄압 앞에 서 있는 모순된 현실을 우리는 다시 마주하고 있다.

정치권은 창작자와 작품을 향한 공세를 멈추고 판단을 관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국회는 창작자 소환과 자료 요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현재 재현되는 형태까지 포괄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 등을 담은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정부와 경찰 또한 공적 권한을 앞세운 압박을 멈추고, 주거지 집회나 신상 노출 등 일상을 파괴하는 위협에 대해 법적 보호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우리는 창작자들이 그 어떤 검열이나 제약 없이 창작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시도에 법률가로서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26년 **10**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